국감 마지막 날 전작권연기·카톡감청 공방

정보위·운영위 등 '번외국감'은 내달 4일까지 계속

국회는 27일 국방위·외교통일위·법사위·보건복지위 등 총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끝으로 21일간의 공식적인 올해 국감 일정을 마쳤다.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운영위·여성가족위 등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이른바 '번외 국감'을 이어가지만, 각 상임위는 28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마지막날 국감에서 2020년 대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사 이버 검열 의혹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 위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 다고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 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한 미동맹 강화를 위해 역사에 평가받을 일을 한 것"이라면서 "불안정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하고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책임자는 이번 기회에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군사주권을 포기한 전작권 재연기 합의는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결정"이라고, 진성준 의원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으로서 1905년 일본에 외교 주권을 강탈당했다면지금은 군사 주권을 우리 스스로 타국 군에 헌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과거 정부의 안보 실패 탓으로 돌리고 "안 보 실패를 이렇게라도 바로잡은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빅딜'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했으며 심재권·정세균 의원은 한미연합사와 미 2사 단 210화력여단의 기존 기지 잔류로 LPP(연합토지 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에 변경사항 이 생겼다면서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서 촉발된 사이버검열 문제가 재부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논란)은 감청의 대상이 된 대공사건 용의자들이 감청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2의 사이버 광우병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일반 감청도 문제지만 패킷감청은 인터넷, 검색어, 이메일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본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정도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는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3일 국감에 불참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출석시 킨 가운데 국감 고의 회피 의혹 등을 캐물었다. 김 총재는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정중히 사과 드린 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 로한 배우 김부선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아파트 난방비 비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뺑소니' 증인선서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 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세월호법 쟁점 3개로 압축 자원

내일 협상 재개 유족 특검후보 추천 등 조율…나머지 법안 일괄타결 나설듯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을 3개로 압축하고 29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내 합의 타결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 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세월호 특별법 협상 을 통해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면서 "다만 유족이 추천키로 한 3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어떻게 추천할 지와 조사위원장·사무처장 분배 방법은 전혀 해결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심 야 회동을 통해 특별검사 추천에 유족 참여,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원장, 위원 추천 방식 등을 놓고 합의 를 시도했으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의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전 히 사법 체계의 훼손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반면,

교사, 교수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참여 보장이 이 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될 진상조사특위의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대상을 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체 위원 중호선을 통해 임명하자고 맞서고 있다.

사전에 특위위원장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경우 편향적이거나 경험이 부족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 출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논리다.

한편,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회동이 끝난 29일 오후 남은 쟁점에 대해 조율을 시도하고,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유병 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까지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일괄 타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원외교·방산비리 의혹

새정치, 진상조사단 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한 자원외교 문제와 방산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각각 구성했다.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이, '방산비리 조사단'은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주간 진행된 국감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바로잡는 작업은 이제시작됐다"면서 "국감에서 밝혀진 수십조원의 혈세낭비와 자원외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위원장은 "외교통일위·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법제사법위 등관련 상임위원을 포함해 10명가량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분야별 5개 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 인물 것 이다고 결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카카오톡 사찰' 이슈화…무차별 표적수사 경고 군대 가혹행위·세월호 부실 수사 등 대안 제시

🤽 국감 인물 내정치 임내현 의원

을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의 중점 이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와 감사, 군내 가혹행위 등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 킨 '카카오톡 사찰'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사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의 활약은 눈부셨다는 평을 받았다. 날카로운 통 찰력과 분석력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었으며 나 아가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의원으로서 제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다.

임 의원은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 국감에서 카카오톡 사찰과 같은 감청은 범죄사실이 구체성 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차별 표적 수사로 이어져 다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 다.

또 감청영장·압수수색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수사를 위한 각종 영장과 협조요청이 과도하 게 발부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뒤 법원·검찰· 경찰·미래부가 협조해 통신사실 확인의 전 과정 을 아우르는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등 대



안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윤일병 사건' 등 군대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군사법원 국감에서 군대 내 폭력가해자와 피해 자 분리문제, 군 사망자 국 가배상금 지급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의 복

무 부적합 판정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 중 81%가 자해·우울증 등 정신이상 증세로 인한 것임을 밝혀내고, 민간상담기관의 지원을 포함해 장병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복무 부적응 병사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건 부실 수사와 관련, 유병언 검거 및 세월호 침몰 책임에 관한 수사는 인천지 검, 목포해경 등 구조 책임자에 관한 수사는 광주 지검에서 따로 진행해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없 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의 세월호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중간감사결과 발표 나흘 전에 청와대에 수시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 부적절성을 꼬집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오병윤 "대북전단 살포, 항공법· ICAO협정 위반"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27일 반북단체의 대 북전단 살포에 대해 "초경량항공기인 '무인자유 기구'의 불법 운행으로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 구협정(ICAO)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무인자유기구에 대해 "항공법 시행 규칙 14조 3항에서 규정한 '기체의 성질을 이용한 무인자유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항공관제절차에서 관제대상으로 '화물을 운송하 는 무인자유기구', 즉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 동력 경(輕)항공기의 하나로서 가스를 이용하여 부양하는 비행기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

¬. 오의원은 또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2번의 부록 4번에 따르면 '무인자유 기구의 운항은 사람 또는 재산 에 위험을 가해서는 안 된다' 고 적시했다"며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서 비행해서는 안 되며, 비행물체가 국가와 국 가를 넘나들 경우 양국으로부

가들 임나를 경우 양국으로부 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5일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위에 열거한 모든 사항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므로 철저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자 "신축 학교 2%만이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대상 1671개 학교 중 단 2%인 36개 학교만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 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신축된 시도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신 축된 1671개교 중 학교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포함한 곳은 36개교에 불과했다.

포함인 듯는 50개교에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24개교, 경남 7개교, 전북 5개교만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했다.

지난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2년 2월 이후 신축된 학교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내진설 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후 33개월 동안 소방방재청이 구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 아 자체 기준을 정한 일부 교 육청에서만 내진설계가 이뤄 진 것이다.



박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아직도 만들지 않 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학교 소방시설 내진 설계 등 놓치고 있던 부분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얼고

누분동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8~49세

27~36세

'무자녀 남성' 희망

감남역 7번출구70m 하나은행 B/D 6층

호남지사 (063) 275-7766

28~48세

대성약국

대인광장



223-7218